

北韓水産物 搬入 및 流通에 관한 研究

1998. 12

朴星快 · 沈起燮

머리말

1988년 「7·7선언」 이후 남북한간의 경제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3억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수산부문에서의 교역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북한수산물의 반입규모가 1,400만달러에 이르는 등 앞으로도 북한수산물의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수산물의 반입은 소비자잉여의 증가, 수입수산물의 대체효과 그리고 전반적인 남북 수산협력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과다반입에 따른 가격폭락을 유발하여 국내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수산물의 반입에 따른 국내시장의 교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남북한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수산물의 반입제도 및 유통경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 수산물 교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반입제한승인품목의 축소, 긴급반입제한조치의 단계적인 완화, 원산지 사후증명제도의 실시, 민간경제협력단의 구성 및 해양수산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 북한수산물 반입 및 유통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무췌록 본 연구결과가 향후 남북 수산물 교역 활성화 및 남북 수산협력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정책입안자, 남북수산물 교역 종사자 및 연구자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12월

韓國海洋水産開發院
院長 洪 承 湧

第1章 序 論

1. 研究背景 및 目的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협력은 1988년 「7·7선언」을 통하여 남북한간 물자교역을 허용하고, 후속조치인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본격화되었다. 또한 남한은 1994년 북·미 핵협상의 타결에 따른 한반도 주변상황의 급속한 변화에 대처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의하여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급격히 진전되어 1997년에는 교역규모가 3억달러를 초과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남북교역 초기단계에서는 철강금속류, 농임산물 및 광산물 등 1차 산품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반입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수산물의 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는 1,4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도 북한수산물의 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제1·2차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에 의하여 수산업에서도 가시적인 협력사업 효과가 나타나는 등 앞으로 수산부문에서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최근 들어 남북관계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남북한간의 신뢰구축과 남북경제의 회복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산부문에서의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방안을 수립하여 남북 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수산물의 반입관련 제도 및 유통실태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남북한간 수산물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수산물의 국내 반입현황 및 유통실태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북한수산물의 반입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수산물의 반입 및 유통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2. 研究內容 및 方法

최근 들어 남북관계의 여건변화에 의하여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북한 수산물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수산물의 반입제도 및 반입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북한수산물의 적정반입량을 추정할 것이다.

먼저 제2장에서는 남북 수산물 교역을 게임이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향후 남북 수산협력의 단계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발전가능성을 기초로 제3장에서는 남북 수산업의 현황, 북한수산물의 반입제도 및 반입현황 그리고 북한수산물의 유통경로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북한수산물 반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북한수산물의 반입 및 유통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특히 수산업관련 자료 및 데이터 부족, 부정확한 수산통계에 의하여 연구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어선, 어항, 어구 등 어업생산시설에 대한 자료부족으로 남북 수산업의 생산성 비교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또한, 북한수산물을 반입하는 반입업체의 경영분석 데이터가 미비하기 때문에 반입업체의 마진율(margin rate) 등 반입업체에 대한 경영분석은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렇듯 데이터 부족 및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남북 수산업관련 연구에 있어서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 수산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수산관련 통계의 정확한 데이터구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러한 한계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第2章 게임이론으로 分析한 南北 水産物 交易

1.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與件의 變化

정부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에 이어 동년 10월에는 「南北經濟開放措置」를 통하여 남북교역을 인정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등 「7·7선언」이 하나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관련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또한 1991년 9월의 UN 동시가입 및 그해 12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과 함께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급진전되었다. 이어 1992년 2월에 기본합의서가 발효되고, 5월에는 「經濟交流協力 共同委員會」가 구성되는 등 남북한간 화해·협력시대가 실천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92년 말 북한당국이 남쪽의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를 이유로 남북대화를 전면중단하고, 1993년 3월에는 핵확산금지(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재차 경색되고 경제교류 및 물자교역도 정체되기에 이르렀다.

1994년 11월 북한의 핵문제가 북·미 핵협상에 의하여 타결된 후 남한은 그 동안의 핵·경제협력 연계정책을 완화하는 제1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법·규정들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로 유보되었던 남북경협을 활성화시켜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 더불어 1995년 4월에는 원산지의 인증범위를 완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南北交易品目通關管理指針」을 제정·시행하였다.

더구나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4월 30일에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정부의 “政經分離原則”에 입각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방침에 따라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¹⁾ 이러한 제1·2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각각 기업인의 북한 방문, 남북교역, 경제협력사업분야에서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 및 미국,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긴장완화 논의를 위한 2개의 분과위원회 구성과 제4차 4자회담의 개최일정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분야에서는 정주영 명예회장의 방북으로 이루어진 금강산유람사업은 북한이 남한의 투자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남한기업의 대북투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의하여 수산물의 소비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이용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수산부문에서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게임이론으로 分析한 南北 水産業의 發展方向

이처럼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현황만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과관계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설명뿐만 아니라 처방적 대안까지 모색하기 위한 방법론의 하나로 게임이론을 이용하였다.

최근까지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게임으로 보고 이를 게임이론이라는 경제이론에 적용하여 분석한 대부분의 논문들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1) 政經分離原則에 입각한 南北經協活性化方針은 신정부 출범전 통일분야 7대 과제로 선정된 이후, 공식적으로는 신정부가 수립한 대북 정책의 세부 추진방향중 하나로 구체화되었음. 이번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는 1998년 3월 26일 개최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에서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활성화방안이 확정된 후,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되었음.

를 죄수의 딜레마게임(Prisoner's Dilemma Game)으로 파악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추구보다는 배반을 우위전략으로 선택함으로써 절대적인 이득보다는 상대적인 이익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남북한은 서로 협조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불신에 의한 대화 부족 및 관련 정보의 부족에 의하여 대립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었다.²⁾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정세의 변화와 냉전구도의 종식에 의하여 해방이후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 의하여 극한대립을 보인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기초로 남북한 수산부문에서의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향후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게임이론의 하나인 傳來定理(folk theorem)를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래정리란 무한반복게임하에서 경기자들이 충분히 미래지향적이라면 경기자들 사이의 협조체제는 게임의 균형가운데 하나로 성립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즉 각 경기자들이 최악의 상황하에서 얻을 수 있는 보수보다 높으며 사회적으로 실현가능한 어떠한 보수도 경기자들이 충분히 미래지향적이라면 동태적 균형으로서 달성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전래정리에서는 사회적으로 실현가능한 보수조합과 개인합리성을 만족하는 보수조합에 대한 개념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주어진 게임하에서 어떤 보수조합이 사회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 것은 경기자들이 자신들의 전략을 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수조합을 의미한다.³⁾ 그리고 개인합리성이란 각 경기자가 자신이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얻을 수 있는 보수조합보다 더 낮은 보수조합을 야기하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의 편의상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첫째, 남북한은 협조와 배반이라는 두 가지 대안의 전략을 사용하여 최선의 보수조합을 전개한다고 가정한다. 둘째, 남북한 두 경기자는 상대방이 협조를 하면 자신도 협조전략을 선택하

2) 김 옥, “남북관계의 게임이론적 분석,” 『통일경제』, 1995. 12, pp.98~115.

3) 퍼트남 교수의 양면게임이론에서는 윈셋(win-set)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음. 즉 윈셋이란 주어진 상황하에서 국내적 비준을 얻을 수 있는 합의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음. 동 이론에서는 논리적으로 따져서 합의가 가능하려면 양 당사자의 윈셋이 교차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므로 윈셋이 클수록 국제합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과 윈셋의 상대적 크기가 합의에 따르는 이득의 분배를 결정짓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김태현·한태준, “양면게임의 논리와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전략,” 『외교와 정치』, 1998, pp.80~113 참조할 것.

고, 상대방이 배반을 하면 자신도 배반을 우위전략으로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즉 상대방이 배반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은 보복전략의 일환으로 배반을 우위전략으로 선택하는 틸-포-탯전략(Tit-for-Tat Strategy)⁴⁾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 두 경기자가 미래지향적이라고 가정한다. 즉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금 당장 상대방을 배반하여 취할 수 있는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보상수준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경기자가 서로 배반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배반보다는 협력을 우위전략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표 II-1〉

南北韓의 協商戰略 및 效果

전략 조합	남한	북한	효 과	
			남 한	북 한
I	협조 (C)	협조 (C)	-남북긴장완화·교류증진 →통일기반조성 -북한의 풍부한 어자원 및 노동 력활용 →사회적 후생증가	-남한의 자본유입 : 경제난 및 식량난 해결 -점진적 개방에 따른 체제불안요 인 증가
II	협조 (C)	배반 (D)	-	-외환부족 및 경제난·식량부족 이 가중 : 이에 따른 체제전복 의 가능성이 있음
III	배반 (D)	협조 (C)	-남북관계의 경색 : 막대한 국방 예산소요→사회적 비용증가	-
IV	배반 (D)	배반 (D)	-사회적 후생손실 : 비용증가	-경제난 및 식량부족 가중 -수산업 생산시설의 기반약화

따라서 남북한은 협조(C)와 배반(D)이라는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최상의 보수조합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전개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

4) 틸-포-탯전략(Tit-for-Tat strategy)은 처음에 협조를 하여 고백하지 않음. 그러나 상대가 협조를 계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협조전략을 선택하나, 만약 상대방이 배반을 하는 경우 다음부터는 즉시 협조를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게 됨.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다시 협조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시 협조를 하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게임이론. 박주현, 「게임이론의 이해」, 해남, 1998, pp.242~245 참조.

생할 것이다.

먼저 남한이 협조를 우위전략으로 선택하는 경우, 우선 남북긴장완화 및 교류증진에 의하여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이 가능하고, 또한 북한의 풍부한 수산자원의 양식·가공을 통한 수산물반입에 의하여 국내수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의 전체적인 사회적 후생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배반을 우위전략으로 선택한다면 남북관계의 경색에 의하여 국방비, 이념 및 체제유지비 등에 대한 과다지출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 즉 기회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 협조전략을 선택한다면 남한의 대규모 자본이 북한으로 유입되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과 식량난의 해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배반을 우위전략으로 선택한다면 외환부족이 더욱 심화된 것은 물론 경제난 및 식량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원유부족과 어로·어구 등 수산물 생산시설의 낙후 및 부족에 의하여 수산업의 생산기반이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전략을 사슴사냥게임⁵⁾의 효용구조로 표시하면 <표 II-2>와 같다. 다만 여기에서의 게임은 1회 반복의 게임이 아니라 남북한이 공존하는 한 계속되는 무한반복게임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게임하에서 남북한의 효용구조를 보면, 서로 협력하는 경우에는 (3, 3), 서로 배반하는 경우에는 (1, 1), 어느 한 쪽은 협력을 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배반을 선택하는 경우의 효용은 (0, 1) 또는 (1, 0)이라는 효용을 각각 취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⁶⁾ 이러한 게임구조하에서 남북한 사회적 실현가능한 보수조합은 <그림 II-1>에서 보는 것처럼 삼각형 ABC가 된다.

이제 남한과 북한의 개인합리성을 만족시키는 최소극대보수(V_i)를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이 협조전략을 선택한다면 남한도 협조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북한이 협조전략을 선택할 경우 남한도 협조를 선택하여 3의 보수를 취하는 것이 배반을 선택하여 얻는 1이라는 보수보

5) 사슴사냥게임(stag hunt)은 본래 루소가 초기 사회계약으로서 원시사회에서의 협조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게임으로서, 사냥꾼들이 한 마리의 사슴을 포위하고 있는데 잘 협조하면 모두가 포식함. 그러나 어느 일방이 바로 옆에 있는 토끼를 잡으려고 포위망을 풀다면 그 사람은 포식은 못하지만 토끼고기를 맛볼 것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얻는 게 없음. 모두가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면 모두 토끼고기를 먹을 수 있음. 사슴사냥게임하에서 배반을 할 동기는 사슴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에 의해 견제됨.

6) 여기에서 사용된 효용의 크기는 설명의 편의상 사용하였으며, 득실의 크기를 0, 1, 2, 3으로 표기하였음.

〈표 II-2〉

南北韓의 效用構造 : 사슴사냥게임

		북 한	
		협 조(C)	배 반(D)
남	협조(C)	(3, 3)	(0, 1)
한	배반(D)	(1, 0)	(1, 1)

다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배반전략을 선택한다면 남한 정부도 배반전략을 선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배반전략을 선택할 경우 남한도 배반을 선택하여 1의 보수를 취하는 것이 협조를 선택하여 얻는 0이라는 보수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최소극대보수는 북한이 남한의 보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 남한이 얻을 수 있는 보수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배반을 선택함으로써 남한이 1단위의 보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남한과 북한의 최소극대보수는 다음과 같다.

$$V_1 = 1, V_2 = 1$$

따라서 <그림 II-1>에서 보면, 사각형 BDEF의 면적인 V^* 가 사슴사냥게임하에서 남북한이 취할 수 있는 사회적 실현가능성이 있는 보수조합과 개인의 합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보수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남북한 수산부문에서의 협력은 최소한의 보수조합을 나타내는 E점에서 점차적으로 최대한의 보수조합을 얻을 수 있는 B점을 향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수산물의 반출·입 위주의 단순교역단계에서 남북한간의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 공동어로수역의 설정 등 경제협력단계, 마지막으로 수산관련 법제도의 통합에 이르는 경제통합단계⁷⁾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수산관련 법제도를 통합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후 남북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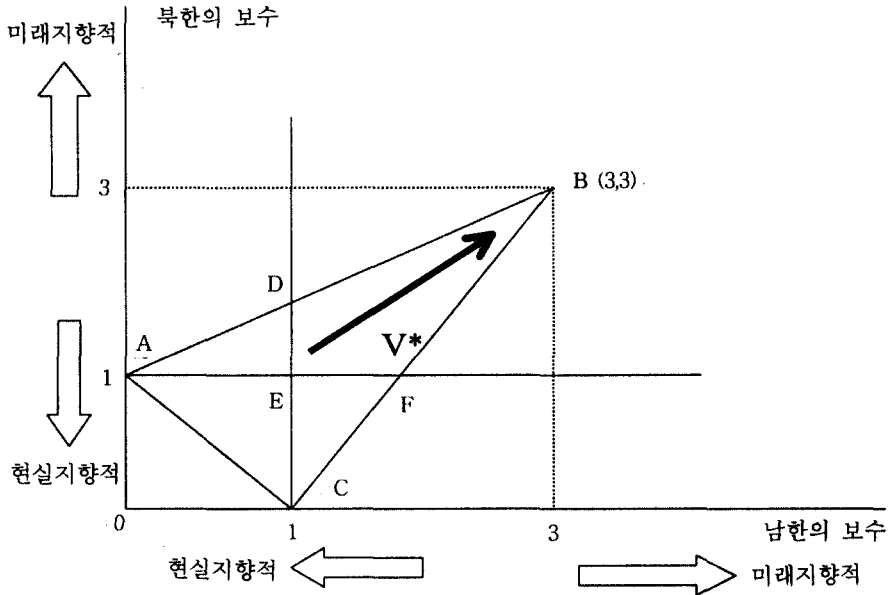
따라서 남북 수산협력은 현재의 단순교역단계에서 최종단계라 할 수 있

7) 김기수·정형찬, “남북한 공동어업정책의 과제 : EC 공동어업정책을 기초로”, 「수산경영논집」, 제24권 1호, 1993. 6.

8) 박성패·장창익, “남북한 수산협력 중대방안”, 「해양21세기」, 나남출판, 1998, pp.413~414.

〈그림 II-1〉

南北韓 實現可能 報酬組合



는 경제통합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즉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남북 수산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하여 남북한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서로의 신뢰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산부문에서의 남북 경제협력을 현재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수산물의 반입제도 및 유통관련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남북한간의 수산물 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수산물의 반입과 관련한 수산정책의 방향도 북한수산물의 반입에 따른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남북한간의 수산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第3章 北韓水産物の 搬入現況 및 流通經路

1. 南北 水産業의 現況

남북한 수산물의 생산량은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수산물 생산량이 북한의 5배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어족자원의 고갈 및 선박용 유류의 공급부족¹⁾ 등 어업여건의 악화로 어선의 출어율이 30% 미만에 그침으로써²⁾ 어획고는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어로기술의 낙후, 어로장비의 노후, 산란기에 있는 어류 및 치어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연근해 정착성 어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최대의 원양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쿠릴열도 및 캄차카반도 일대에서의 어획쿼터량이 1993년 2월 러시아로부터 무상 3만톤, 유상 3만톤 등 모두 6만톤으로 제한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어획실적의 부진으로 어획쿼터량이 4만톤으로 감소하였다. 더구나 1997년에는 어획쿼터량이 3만톤으로 감소하였으며, 1998년 11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2차 「북·러 어업공동위원회」³⁾에서는 어획쿼터량을 2만 5천톤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북·러간 수산

1) 최근 북한은 심각한 외화난으로 원유도입을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도입량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도입규모는 1996년에 94만톤에서 1997년에는 51만톤으로 45.7% 감소하였음. 또한, 1998년 북한은 자체수입분을 포함하여 20만톤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한편, 연료난에 의하여 어선의 출어가 어려워짐에 따라 연근해에서 무동력 전마선을 이용한 「세소어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한중백, “수산물”, 월간 「북한뉴스레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8. 5.

3) 북한·러시아는 1987년 5월 「수산분야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매년 평양과 블라디보스톡에서 교대로 「어업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1998년 11월 24일 「제12차 어업공동위원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어 북·러 경제수역 등에서의 양측어선들의 작업결과 및 어업규정 준수여부 확인, 공동양식·판매를 비롯한 수산업부문 협력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임.

〈표 III-1〉

南北韓 水産物 生産量の 推移

단위 : 만톤, %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7
북한(A)	109.0	99.8	105.2	87.6	65.0
남한(B)	333.5	347.6	334.8	324.4	323.8
A/B	3.1	3.5	3.2	3.7	5.0

자료 : 한국은행, 「북한의 GDP 추정결과」, 각년도.

업부문의 협력관계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가 자국의 200해리 내 외국어선의 조업규제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의 북한의 어로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2〉

年度別 北韓 어획쿼터량의 推移

단위 : 만톤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96	1997	1998
어획쿼터량	20	12	6	4	3	조건부 3	2.5

자료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410호.

한편 북한은 수산업을 외화획득원과 식량공급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시함에 따라 북한의 수산물 수출액은 1997년에 7천만달러로 전체수출액의 7.8%를 점유하는 등 주요한 외화획득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 중국 및 남한에 대한 수출이 거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남한의 수산물 수출액은 전체수출액의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의 어업생산기반은 어항, 어선, 어구 및 어업기자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항은 어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산기반시설로서 북한의 어항규모는 현재 동해안에 15개소, 서해안에 11개소 등 총 26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어선보유척수는 원양어업을 위한 3,750톤급 선미트룰선과

〈표 Ⅲ-3〉

南北韓 輸出額對比 水産物 輸出額の 比重

단위 : 억달러, %

구 분	북 한			남 한		
	총수출	수산물	점유율	총수출	수산물	점유율
1995	7.4	0.766	10.4	1,250.6	17.2	1.4
1996	7.3	0.728	10.0	1,297.2	16.4	1.3
1997	9.1	0.707	7.8	1,361.6	14.9	1.1

자료 : 〈표 Ⅲ-1〉과 동일.

연근해 어업을 위한 450톤급 어선을 비롯하여 총 3만 600척에 달하는 크고 작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⁴⁾ 현재까지 북한의 정확한 어선척수 및 조업률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1998년 8월 3일 북한은 중앙방송을 통하여 신의주조선소에서 만능화된 고깃배를 새로 건조했다고 보도하였다. 즉 동 선박은 건착, 트롤, 저인망 등 여러가지 어로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선내에 각종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선박 톤수 등 구체적인 선형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소형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현재 북한의 어업생산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식량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산물을 주민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아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공장,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문제를 비롯하여 물고기들이 서식하는 데 좋은 바다풀 보호와 ‘알낱이 철’과 ‘알까기 시기’에 맞게 물고기 잡이에 나서는 수자원 보호대책과 함께 바다에 양식장을 조성하여 물고기류, 게류, 조개류 등 여러 종의 수산자원 증식사업을 전개하는 등 수산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남북한 통일 이후의 산업구조정 : 북한 경제구조를 중심으로(1998)」, 김민중, 「남북한수산업의 발전방향 : 통일수산정책과제」(1996), 이병기·박영호·최종화, 「북한수산업의 산업적 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3. 12)를 참조할 것.

최근 북한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방지대책 등을 규정한 “바다오염방지법”을 1997년도에 채택하였으며, 식량난 해소의 일환으로 수산물의 증산을 위하여 연안어업의 확대, 양어사업의 적극적인 장려, 바닷가 수산물 양식장 및 수산물 양식사업의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北韓水産物の 搬入制度 및 搬入現況

1) 북한수산물의 반입제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서는 남북교역을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하며, “반출·반입”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사용대차·중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을 포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2조에서는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며, 통일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역당사자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교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⁵⁾ 및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제한승인품목⁶⁾은 총 178개 품목에 이르고 있으며, 그 이외

5) 남북교역대상물품의 분류는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상품분류에 의하며, 동 분류된 품목의 세분류는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HSK)에 의함.

6) ①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별 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품목
②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 및 영수방법이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경우
③ 반입물품으로서 도서, 음반, 미술품, 도예·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 엽서·연하장
④ 반입물품으로서 별표 1에 계기한 물품(별표 1 : 통일부고시 제98-2호 참조)

에는 포괄승인품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북한수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입여부 및 물량을 승인하는 반입제한승인품목과 포괄승인품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 반입제한승인품목은 활미꾸라지, 민어(냉동), 홍어(냉동), 낙지(냉동), 오징어(냉동), 가리비(냉동), 새우 및 보리새우(염장·염수장) 등 7개 품목이 포함되고, 그 이외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을 요하지 않는 포괄승인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표 Ⅲ-4〉

北韓水産物の 搬入制限承認品目

연번	품 목 번 호	품 목	비 고
20	0301-99-9070	미꾸라지(활어)	추가
21	0303-79-9095	민 어(냉동)	
22	0303-23-9093	홍 어(냉동)	
23	0306-23-3000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추가
24	0307-29-1000	가리비(냉동)	
25	0307-49-1020	오징어(냉동)	
26	0307-59-1020	낙 지(냉동)	

자료 : 통일부, 「남북교역실무안내」,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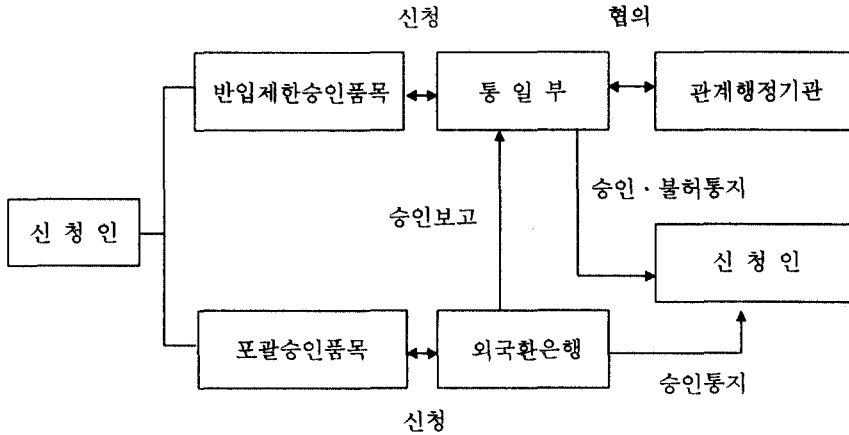
반입제한승인품목의 반입승인 심사기준은 당해 물품의 과다공급에 따른 국내시장의 교란 가능성, 국내 생산자 보호측면, 반입가격의 적정성, 남북교역의 확대·발전 가능성 및 기타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수산물의 반입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당해 물품이 수출입별도공고, 통합공고,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및 통일부고시 등에서 반출·입제한승인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반입제한승인품목은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

⑤ 임대 또는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품목

아야 하며,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Ⅲ-1〉 北韓水産物の 搬入節次



북한에서 반입된 수산물의 반입통관절차는 일반수입 통관절차를 준용하므로 수입통관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북한산 수산물의 경우 관세비과세로 처리됨에 따라 반입물량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전량 검사후 면허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반입통관절차를 거쳐 북한수산물은 국내시장으로 반입되고 있다. 즉 반입통관절차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반입된 북한산 수산물은 국내 유통망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다.

2) 북한수산물의 반입 현황

남북한간의 수산물교역은 1984년 8월 남북경제회담이 개최된 이래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이 이미 부분적으로 행해져 왔고, 1988년 7·7선언 후인 그 해 11월에 현대종합상사가 북한의 원산지 표시가 된 상품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산 모시조개 40kg을 직접교역 형태로 반입한 바 있으며, 1990년대부터

정부의 품목별 반입승인제도하에서 주로 냉동명태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 직접교역이 급격히 증가하였다.⁷⁾

최근 4년간 북한상품의 반입추이를 보면 <표 Ⅲ-5>와 같다. 북한상품의 반입량은 1994년에 1억 7,629만달러에서 1997년에는 1억 9,306만달러를 기록하여 소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8년 8월까지 북한물품의 반입규모는 남한의 IMF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0.7%감소한 5,231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북한수산물의 반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에 272만 3천 달러, 1995년에 269만 2천달러, 1996년 910만 1천달러 그리고 1997년에는 1,457만 2천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0.1% 증가하였다. 그러나 IMF여파로 1998년에는 400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57.9%나 감소하였다. 한편 전체반입실적대비 수산물의 반입비율을 보면 1994년에 1.54%에서 1997년에는 7.5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北韓商品의 搬入實績 推移

단위 : 천달러,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¹⁾
수산물	반입실적(A)	2,723	2,692	9,101	14,572	4,042
	증가율	210.14	-1.14	238.1	60.1	-57.9
전품목	반입실적(B)	176,298	222,855	182,399	193,069	52,313
	증가율	-1.04	26.4	-18.15	5.84	-60.7
비율(A/B)		1.54	1.20	5.0	7.54	7.7

자료 : 1)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 통일부, 「1997년도 남북교류협력 종합평가」, 1998.

주 : 1) 1998년 8월말 기준임.

한편 어종별 반입실적을 보면, 반입물량면에서는 냉동명태가 2,583톤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냉동문어 및 백합이 각각 2,366톤, 1,578톤을 기록하고

7) 이병기·박영호·최종화, 「북한수산업의 산업적 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3. 12. p.102.

있다. 금액면에서는 냉동문어가 628만 1천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냉동복어가 206만 4천달러, 대합이 152만 7천달러 그리고 냉동명태가 112만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어 이들 4개 품목이 북한수산물의 반입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증가 및 직접교역의 증가는 남한의 연안해역이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부에서는 남북한간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부진에 의한 공급물량 확보로 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추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수산물교역은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산 수산물을 반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물론 북한으로 반출된 수산물은 물량면에서 1994년에 100톤, 1995년 36톤, 1996년에 205톤 그리고 1997년에는 73톤을 기록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994년에 9만 7천달러에서 1997년에는 26만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Ⅲ-6〉

主要 魚種別 搬入實績 推移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1994		1995		1996		1997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냉동)복어	-	-	133	610	593	3,132	328	2,064
(냉동)명태	2,015	615	-	-	25	35	2,583	1,120
생백합	114	36	385	432	476	519	1,578	1,527
(냉동)꽃게	144	374	21	25	38	283	49	208
(냉동)우렁이	11	20	34	33	49	244	143	1,015
(냉동)문어	27	76	345	812	1,150	2,945	2,366	6,281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그러나 수산물의 반출은 북한에서 반입된 수산물의 품질이 불량하여 북한으로 반품된 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수산부문에 있어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반출된 수산물은 거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표 III-7〉

水産物の 搬出 実績 推移

단위 : 톤, 천달러

구 분	1989~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8
물 량	1,126(천속)	100	36	205	73	41
금 액	6	97	155	142	260	94
품목수	1	1	5	2	9	6

자료 : 1)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제86호.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수산물교역은 반입위주의 일방적인 교역에 불과한 실정이다.

3. 北韓水産物の 流通經路 및 問題點

1) 북한수산물의 유통경로

북한수산물의 유통경로 또한 수입수산물의 유통경로와 거의 비슷하다. 다만 북한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의하여 유통경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수산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유통경로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북한수산물의 생산·가공단계에서 남포항과 나진항(선봉항)으로 운송되는 북한내에서의 유통경로이고, 두 번째로 남포항 또는 나진(선봉)항에서 남한의 인천항 또는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해상수송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수산물이 국내유통망을 통하여 최종소비자가 소비하는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 북한내에서의 유통경로

먼저 북한의 상업유통체계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상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은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제3기 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총 9장 96조로 구성되어 있다.⁸⁾ 북한의 상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상업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북한의 철도, 항만, 도로 등 사회간접 시설의 현황을 보면 <표 Ⅲ-8>과 같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1997년도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시설현황을 보면, 철도부문은 총연장 5,214km로 남한의 6,580km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다. 그러나 도로연장은 2만 3,377km로 남한의 8만 4,968km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Ⅲ-8>

南北韓 社會間接資本施設의 現況

구 분	1975		1996		1997	
	북 한	남 한	북 한	남 한	북 한	남 한
철도총연장(km)	4,292	5,619	5,112	6,559	5,214	6,580
도로총연장(km)	20,670	44,905	23,369	82,342	23,377	84,968
항만능력(만톤)	-	56,668	3,501	29,526	3,501	35,993
선박량(만톤)	12	208	92.1	699.3	95.0	675.6

자료 : 1)한국은행, 「북한의 GDP추정결과」, 1996, 1997

2)통일원, 「남북교역추진현황 : 1988~1996」.

북한수산물을 남한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어, 패류, 냉동·냉장 수산물 그리고 가공수산물 등과 같은 수산물을 주요 항만인 나진항(선봉항)이나 남포항으로 수송해야 한다. 특히 수산물의 특성상 신속한 수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륙수송인프라의 정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의하여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중점적인 투자를 할 수 없었다. <표 Ⅲ-8>에서 보다시피 북한의 내륙수송인프라는 1975년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 전역에서의 유통부족과 열악한 도로사정에 의하여 내륙수송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작업능률의 저하 등에 의하여 수산물의 신속한 수송이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륙운송시설의 낙후는 북한수산물의 품질경쟁력을

8) 북한의 상업유통은 정부의 계획에 의해 생산된 재화 및 용역을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상업유통망을 통해 분배되는 것을 의미함. 더 자세한 사항은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6년을 참조할 것.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해상운송

북한수산물의 해상운송은 북한의 남포항 또는 나진항(선봉항)에서 선적하여 인천항 또는 부산항 등 남한항만에서 하역을 하는 수송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제교류의 한계에 의하여 남북한 국적선이 동 항로에 투입되지 못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제3국의 선박을 투입하여 수산물을 수송하고 있다. 즉 수산물 반입승인을 득하고 나서 반입업체는 제3국선을 용선하여 북한의 남포항이나 나진항에 투입하여 수산물을 선적하게 된다.

그러나 주로 간접교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적기일내에 선박을 입항시키더라도 현지에서 선적물품이 미처 준비되지 않거나 입항수속과정에서의 입항허가서가 적시에 발급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남북간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선박은 공해상으로 나간 뒤⁹⁾ 다시 남한해역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수송비용 및 운항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이는 북한수산물의 반입비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수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3) 국내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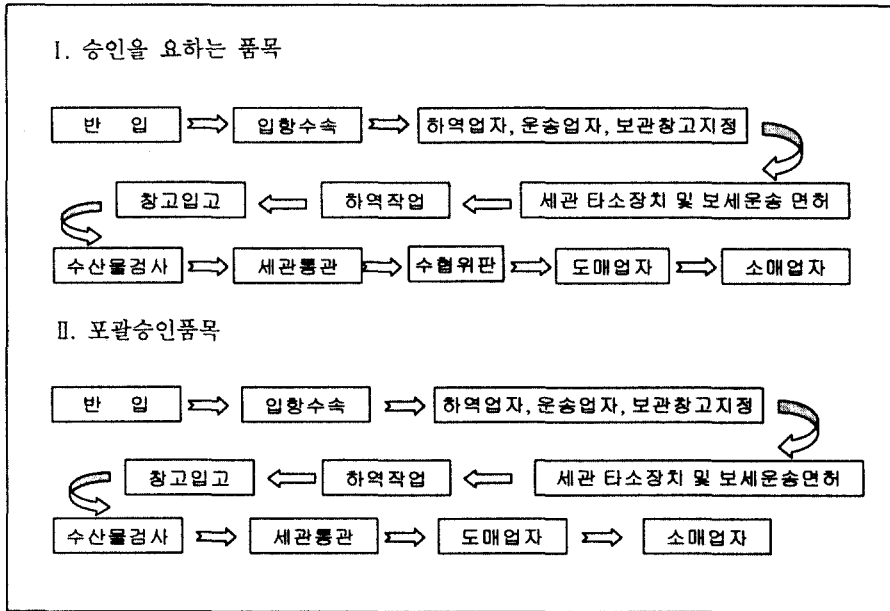
이러한 해상수송을 통하여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입항한 북한수산물은 검역소, 항만출입국관리소, 세관 등의 수속과정을 거쳐 부두접안이 되고 준비된 반입 검사절차를 마치면 반입업체는 이를 수협위원장 또는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하거나 바로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두 가지 유통경로를 거치게 된다.

현재 활미꾸라지, 새우젓, 냉동홍어, 냉동낙지 등 7개 품목의 반입제한승인품목의 경우 국내 연근해 어민의 보호와 시장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어민의 권익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판장이나 공영도매시장에 위탁판매를 통하

9) 그러나 남북교역에 있어서 반출의 경우에는 반입과 달리 반드시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안됨. 이는 북한당국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선박이 남한에서 직접 온 것을 북한주민에게 알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Ⅲ-2〉

北韓水産物の 國內流通經路



여 도매업자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소비자들에게 유통된다. 이에 반하여 포괄승인품목은 반입업체가 바로 도매업자에게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유통경로가 있다.

2) 남북 수산물 교역의 문제점

이상과 같이 북한수산물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수송과정을 거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먼저 북한수산물의 반입비용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수산물의 반입은 거의 간접교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홍콩, 일본, 중국 등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이 중심이 되고 있어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남북간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국적선 투입이 제한되고 있는 관계로 제3국적 선박을 용선해야 하며, 공해상으로 출항한 뒤 다시 남한해역으로 운항해야 하기 때문에 해상운임이 과다 발생하여 비용상승을 주도하고 있

는 실정이다.¹⁰⁾

또한 수산물의 반입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비용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반입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남북 교역물량이 증가해야 한다. 즉 반입물량의 증가를 통하여 반입업체는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으며, 업체들간 경쟁체제가 정착됨에 따라 북한수산물을 효율적으로 반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통관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즉 북한수산물의 반입승인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중의 하나가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물론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하여 북한산에 대한 관세면제라는 혜택으로 제3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통관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운영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북한수산물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의 특성상 신속한 수송 및 급속 냉동·냉장이 필요하나 북한내에서의 냉동·냉장시설의 낙후, 유통부족에 따른 전력난, 내륙수송 인프라의 부족에 의하여 수산물의 신속한 수송이 힘들고, 어종별·크기별 선별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냉동하여 반입된 북한수산물의 대부분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아무리 신선한 수산물이라 할지라도 냉동과 선별작업 기술 미흡, 냉동·냉장시설의 낙후 등에 의하여 고가의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남북한간 수산물 교역이 북한수산물의 반입위주의 일방적인 무역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으로 반출되는 수산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입량에 비하여 그 규모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북한수산물의 품질저하에 따른 반품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역불균형의 문제 또한 향후 남북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인적·물적 교류의 제한, 통신수단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10) 북한수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업체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제3국의 선박을 물색하여 투입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해상운임은 선적물량의 톤수에 의한 운임률이 아니라 선박의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정기용선(Time Charter)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대부분임.

수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입업체가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간접교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 수산물이 국내로 과다 반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이 발생하여 국내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第 4 章 經濟的 效果 및 適定搬入量의 推定

1. 北韓水産物 搬入의 經濟的 效果

지금까지 북한수산물의 반입현황 및 유통실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북한수산물의 반입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만약 북한수산물의 대량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반입량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수산물의 반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먼저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 이외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생산자 측면에서는 북한수산물의 대량반입은 국내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산물 가격의 폭락, 이로 인한 국내어민의 어가소득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 마지막으로 수입수산물을 북한수산물로 대체하는 경우 발생하는 대체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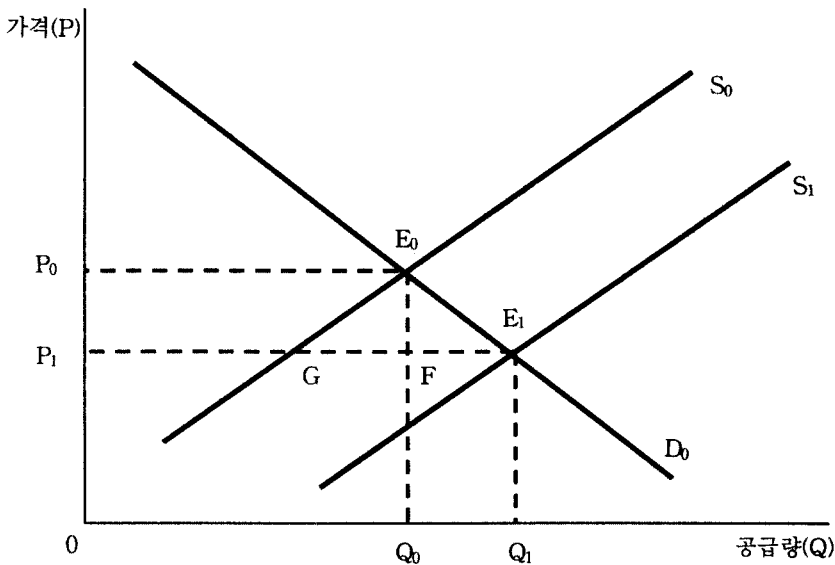
1) 긍정적인 效果 : 소비자잉여의 증가

남북한간의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하여 관세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북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의 공식입장에 의존하여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북교역은 무역자유화 효과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즉 남북교역이 활성화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한의 상품이 남한으로 반입되고, 남한이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북한으로 반출되어 무역자유화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는 국민경제측면에서는 이득이 되나 북한수산물의 반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계층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를 하나의 그래프를 통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남북간 수산물 교역은 거의 일방적인 반입위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북한의 경제사정에 의하여 북한은 남한의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으며, 또한 남한의 수산물 가격이 북한보다 일반적으로 비싸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북한 수산물의 반입증가는 국내시장에서의 수산물 공급량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그림 IV-1>

北韓水産物 搬入의 經濟的 效果



<그림 IV-1>에서 보는 것처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 E_0 에서 최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하자.¹⁾ 균형점 E_0 에서 최초가격은 P_0 이고, 공급량은 Q_0 가 된다. 이때 다른 조건들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북한수산물의 반입은 남한에서 수산물의 공급량 증가를 의미한다. 즉 공급곡선이 S_0 에서 S_1 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새로운 균형점은 E_1 이 된다.

1) 일반적으로 채소나 생선과 같은 농수산물의 경우 저장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은 낮아진다. 즉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가파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다소 완만한 기울기의 공급곡선을 상정하여 분석함.

새로운 균형에서는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즉 소비자잉여가 사각형 $P_0E_0E_1P_1$ 만큼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회적 잉여는 삼각형 E_0E_1G 만큼 증가하여 국민경제측면에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남북 수산물 교역의 활발한 진행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회비용의 감소를 유발할 것이다. 즉 과거처럼 정경연계에 의한 대립과 상호불신에서 탈피하여 정경분리의 원칙에 의한 상호간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정적인 효과 : 생산자잉여의 감소

남북한간의 수산물 교역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국내어민 즉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피해 즉 수산물의 가격폭락에 의한 어가소득의 감소 등과 같은 국내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수산물의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생산자잉여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먼저 고가어종이나 대중성 어종의 북한산 수산물이 대량으로 국내로 반입되어 공급과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는 등 국내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수산물의 특성상 미래의 생산량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시점에서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동시에 북한수산물이 국내로 대량으로 반입되면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격폭락에 의하여 동종어업에 종사하는 국내어민의 소득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여 경영부실을 야기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산 수산물이 국내 총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1994년 0.068%에서 1997년에는 0.168%로 약 3배 정도 증가하여 북한수산물 반입량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반입량의 규모가 아주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내 수산물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연도에 몇몇 어종이 대량으로 반입됨으로써 국내시장에 영향을

〈표 IV-1〉 年度別 供給量對比 北韓産 水産物의 占有率 推移

단위 : 천톤, %

구 분	국 내 공 급 량				북한수산물 반입량(B)	점유율
	생 산	수 입	재 고	합계(A)		
1994	3,477	792	360	4,629	3.140	0.068
1995	3,348	948	460	4,756	1.250	0.026
1996	3,244	1,205	371	4,820	3.941	0.082
1997	3,244	1,189	427	4,860	8.105	0.168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미칠 가능성은 있다.

이처럼 북한수산물이 대량으로 반입되는 경우 남북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후생증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국내어민의 보호 및 시장교란의 방지를 위하여 북한수산물의 적정반입량의 규모를 산출하여 만일의 공급 교란 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 어종별 공급량대비 반입량의 비중을 보면, 대부분의 북한수산물이 전체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나, 문어 및 백합 등 몇몇 어종의 경우에는 점유율이 10%를 초과하고 있어 가격하락을 유발하여 국내동종어민의 소득감소와 시장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어민의 보호라는 측면과 가격안정의 측면에서 북한수산물의 적정반입량을 추정하여 수산물시장의 동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대체효과

한편,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량은 국민소득 증가에 의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소비량 증가에 의하여 국내생산량만으로는 국내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1980년에 3,700만달러에 불과하던 수산물 수입액이 1997년에는 1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2〉 主要 魚種別 總供給量對比 北韓水産物의 占有率

단위 : 톤, %

어 종	총 공 급 량				반입량	반입량/ 공급량
	생산(A)	수입(B)	수출(C)	A+B-C		
명 태	222,187	37,642	4,001	255,828	2,583	1.0
조 기	22,101	8,804	32	30,873	2	0
갈 치	78,737	12,882	3,744	87,875	35	0.04
문 어	8,290	7,494	55	15,729	2,366	15.04
가리비	833	659	11	1,481	-	-
복 어	7,471	2,041	282	9,230	328	3.55
백 합	2,122	293	0	2,415	1,657	68.6
새 우	26,165	19,116	351	44,930	13	0.029
바지락	30,812	3,589	7,317	27,084	377	1.39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주 : 1997년 반입량 기준임.

〈표 IV-3〉 南韓의 水産物 輸入實績 推移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전체수입금액(A)	22,291	31,135	69,843	135,119	150,339	144,616
수산물수입액(B)	37	83	368	842	1,080	1,045
A/B × 100	0.2	0.3	0.5	0.6	0.7	0.7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1997.

주 : 수입금액은 CIF가격(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임.

한편,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이 아시아전역으로 확산되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따라서 IMF체제하에서 북한수산물의 반입을 통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부 어종의 수입수산물을 북한산으로 대체함으로써 부족한 외화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의 경제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수산물로 대체가능한 어종으로는 북한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명태, 가자미, 도루묵, 오징어, 정어리 등의 어류, 굴, 홍합, 대합, 가리비 등 패류, 미역, 다시마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효과²⁾는 수입수산물을 북한수산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북한의 식량난 및 경제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긴장완화 및 화해를 통하여 남북 수산협력의 장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北韓水産物의 適定搬入量 推定

현실적으로 북한수산물의 적정반입량을 정확히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적정반입규모를 산출하는 기준으로는 수입의존도,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급관계 등 여러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즉 가격탄력성³⁾을 추정하여 국내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는 수준에서 적정반입량을 추정하였다. 즉 주요 어종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북한수산물의 반입량을 국내공급량 내지는 국내소비량의 5% 내지는 10%까지 허용했을 경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수산물의 적정반입량 규모를 추정하기로 한다.

먼저 공급량과 실질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격함수를 통상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어종별 공급량은 「식품수급표」상의 1인당 공급량을 이용하였으며, 실질가격은 「수산물계통판매고연보」에 나타난 연평균 계통판매가격을 전도시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실질가격을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1971년부터 1996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여기서 식품수급표상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단위근(unit root)의 존재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최소자승법을 적용한 것은 일종의 공급측면에서의 외생적인 충격 즉 공급량의 증가에

2) 수입수산물을 북한산 수산물로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체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자료부족에 의하여 대체효과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함.

3) 일반적으로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Delta P/P$)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Delta Q/Q$)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공급량의 변화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음.

대한 대체적인 가격반응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⁴⁾

가격함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 오징어와 새우, 포괄 승인품목으로는 명태, 갈치, 조기, 가자미, 멸치 그리고 바지락 등 총 8개 어종에 대하여 가격함수를 도출하였다.⁵⁾

추정결과를 보면 <표 IV-4>와 같다. 추정한 결과, 수산물의 가격반응도는 공급량의 변화와 같은 외생적인 공급충격으로 인한 가격변동효과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명태의 경우 공급량이 1% 증가하면 가격은 0.2776% 하락하고, 공급량이 1% 감소하면 가격은 0.2776%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개 품목중 새우와 멸치의 경우 공급량의 변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다른 수산물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한수산물의 반입량을 국내공급량대비 5% 수준까지 허용한다고 할 때 국내시장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표 IV-4>와 같다. 반입량이 5% 정도 증가하면 주요 어종의 가격변동효과는 명태는 1.388%, 조기 1.547%, 갈치 0.605%, 가자미 0.309%, 오징어 2.281%, 멸치 3.425%, 새우 2.641% 그리고 바지락이 1.312%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북한수산물의 반입증가가 국내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는 반입량을 10%까지 허용할 경우 가격변동효과는 명태가 2.776%, 조기 3.094%, 갈치 1.209%, 가자미 0.617%, 오징어 4.561%, 멸치 6.850%, 새우 5.281% 그리고 바지락이 2.624%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대부분의 수산물 가격변동효과는 5% 이하로 북한수산물의 반입량을 10%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가격변동효과는 매우 작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토대로 북한수산물의 반입량을 국내총공급량의 5~10%까지 허용한다면 가격폭락 등과 같은 시장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도 북한경제난의 해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남북관계의 긴장완

화를 가능하게 하여 상호간의 신뢰회복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북한수산물의 반입량을 국내공급량의 5%와 10%까지 허용하

4) 유동민, 「수산물의 수요구조 및 전망에 관한 연구 : 해조류를 중심으로」, 수산경제연구원, 1995. 12. pp.17~20.

5) 물론 모든 어종에 대해서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공급량의 변동에 따른 가격의 반응도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로 주요 어종에 대한 가격반응도만을 추정하였음.

<표 IV-4 >

主要 魚種의 價格彈力性 推定結果

어 종	가격탄력성	공급량 변동시 가격반응도	
		5%	10%
명 태	-0.2776 (-1.1161)	-1.388	-2.776
조 기	-0.3094** (-3.7087)	-1.547	-3.094
갈 치	-0.1209 (-1.2667)	-0.605	-1.209
가자미	-0.0617 (-1.4738)	-0.309	-0.617
오징어	-0.4561*** (-7.7191)	-2.281	-4.561
멸 치	-0.6850** (-3.3406)	-3.425	-6.850
새 우	-0.5281*** (-5.7697)	-2.641	-5.281
바지락	-0.2624* (-1.8252)	-1.312	-2.624

주 : 1) (w)은 t-value

2)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을 각각 나타냄.

는 경우 포괄승인품목과 반입제한승인품목 어종의 적정반입량을 추정하면 <표 IV-5> 및 <표 IV-6>과 같다.

따라서 북한수산물의 반입량을 국내공급량 대비 5~10%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민 등 생산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작은 반면에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를 통한 상호신뢰관계의 구축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수산물의 반입어종 및 반입량이 매년 일정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어획량 및 식량수급상태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게 변동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수산물의 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수산물의 생산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수산물의 반입시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국내수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반입어종 및 반입물량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V-5〉

包括承認品目の 適定搬入量 推定

단위 : 천톤

구 분		명 태	조 기	갈 치	가자미	멸 치	바지락
공급량		255.8	30.8	87	7	224	27.1
적 정 반입량	10%	19.22~ 31.94	2.31~ 3.85	6.60~ 10.96	0.53~ 0.87	16.83~ 27.97	2.04~ 3.38
	5%	9.61~ 15.97	1.16~ 1.92	3.30~ 5.48	0.26~ 0.44	8.41~ 13.99	1.02~ 1.69

주 : 1997년 공급량 기준.

〈표 IV-6〉

搬入制限承認品目の 適定搬入量 推定

단위 : 천톤

구 분		가리비*	낙 지*	미꾸라지*	홍 어*	민 어*	새 우	오징어
공급량		1.5	24.2	5.1	8.5	89.6	44.9	335.4
적 정 반입량	10%	0.142~ 0.157	2.29~ 2.5	0.48~ 0.53	0.81~ 0.89	8.51~ 9.41	3.37~ 5.61	25.2~ 41.88
	5%	0.071~ 0.078	1.15~ 1.27	0.24~ 0.26	0.40~ 0.44	4.26~ 4.70	1.69~ 2.80	12.6~ 20.94

주 : 1) 1997년 공급량 기준.

2) *는 가격탄력성이 주요 8개 어종의 가격탄력성과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추정.

第5章 北韓水産物 搬入 및 流通의 改善方案

이상에서 북한수산물의 반입제도 및 반입현황, 북한수산물의 반입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았다. 북한수산물의 반입은 수산물 시장의 가격안정과 수급안정 측면,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소비자잉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생산자 즉 어민의 측면에서는 가격하락에 의한 어가소득의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북한수산물의 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북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남북 수산업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 수산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북한수산물의 반입제도 및 유통구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북한수산물에 대한 반입규제를 실시하기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반입자유화를 실시하여 남북한 수산업의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라는 측면에서의 남북 수산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수산물의 반입 및 유통의 개선방안으로는 반입제한승인품목의 축소, 긴급반입제한조치의 단계적 완화, 원산지증명제도의 개선, 남북 상호간의 정보교류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1. 반입제한승인품목의 축소

먼저 남북 상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입가능성이 작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포괄승인품목으로 규정하여 반입자유화를 실시하고, 반대로 어민보호 등 국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반입제한이 필요한 품목, 북한산 반입보다는 제3국산의 위장반입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산어민보호를 위한 조정관세 부과품목은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조정하되, 반입가능성이 적거나 조정관세 30% 미만의 품목은 제외하고, 조정관세 비부과 품목중에서 연근해 어업인과의 마찰이 예상되어 특별히 제한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될 확률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반입제한승인품목을 기존의 10개 품목에서 1998년에 7개 품목으로 축소하는 등 북한수산물의 반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교류의 활성화, 국내산업 보호 등을 고려하고, 수입이 자유화된 제3국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북한수산물의 반입제한승인품목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반입량 및 품목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반입제한승인품목 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어종에 대해서 반입자유화의 실시가 바람직하다. 즉 수입의존도가 높은 활미꾸라지, 냉동홍어, 냉동낙지 및 냉동가리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입제한승인품목에서 포괄승인품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 긴급반입제한조치의 단계적 완화

현행규정에 의하면 긴급반입제한이 되는 대상품목으로는 「農水産物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구매사업을 실시하는 품목과 북한수산물의 대량반입으로 국내시장에 교란이 발생하여 긴급히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품목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일부장관에게 긴급반입제한을 요청한 품목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제15조 및 제18조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과 “사업승인에 관한 조정명령”에서는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조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들은 북한산 물품의 과다반입에 따른 국내시장의 교란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수산물

의 경우에는 다소 완화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즉 남한의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산물의 수입의 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이며, 현재 북한의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수산물이 대량으로 반입되어 국내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른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을 실시하면서도 유독 북한수산물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교류·활성화 및 남북 수산협력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APEC이 수산물을 포함한 9개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등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주의의 기운이 팽배해 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긴급반입제한조치와 같은 규제조항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남북 수산물 교역에 있어서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원산지 사후증명제도의 실시

남북간 경제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하여 반출 및 반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제3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등 구체적인 확인사항은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미흡한 상태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북한당국이 발행한 것이라는 확인을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관계기관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용을 부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는 방안, 통일된 규격의 원산지증명제를 사용하는 방안, 교역창구의 단일화를 통한 위장반입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¹⁾

더구나 북한수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이 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산물의 특성상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관

1) 최세균,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 개선방향”, 「농촌경제」, 제19권 제2호, 1996년 여름.

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북한 수산물의 원산지증명제도를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 일례로 북한수산물에 대하여 반입시 일단 예치금형식으로 관세를 먼저 부과하여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세예치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북한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을 실시하여 북한산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치금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관세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산 수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먼저 통관을 실시한 후 사후적으로 원산지증명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원산지 사후증명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반입품목별로 원산지증명제의 시행을 차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 제도를 폐지할 경우 제3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제도를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제3국산과 북한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수산물 특히 가리비와 같은 패류에 대해서는 현행제도를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원산지증명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4. 「민간경제협력단」의 구성

최근 남한은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북한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통한 경제개방을 추구하는 등 남북한 모두 경제분야에서의 상호협력에 있어서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산부문에서도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향후 남북한간 수산물 교역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수산물을 반입하는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특정 수산물이 과도하게 반입됨으로써 국내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불확실한 북한의 상황과 사업경험이 없는 점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효율적인 수산물의 반입이 곤란하다. 따라서 남한의 수산업 협동중앙회와 북한의 수산협동조합²⁾간 「민간경제협력단」을 구성하여 남북

2) 1984년 말 현재 수산협동조합의 수는 함경북도에 68개, 함경남도에 67개, 강원도에

수산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남북 수산협력의 창구단일화를 통하여 북한 수산물의 대량반입에 따른 국내시장의 교란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남북수산자원에 대한 공동조사와 함께 공동어로 사업 등을 통한 수산자원의 공동개발과 양식기술개발 등 수산기술부문의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경제협력 추진은 남한으로서는 해외의존도가 큰 수산 가공원료어인 명태, 가자미 등의 어업자원량이 많고, 이들 어획물의 반입시 수송에 있어서 선도유지 및 수송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북한으로서는 어망, 어구 등 어업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남한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회유 및 분포상으로 볼 때 이들 자원의 이용관리가 남북한 어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관심사이므로 상호정보교환, 전문가 파견 등 인적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물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북한 수산물을 반입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의 경제 특히 수산업 관련 정보 부족이 합리적인 수산물 반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안기부, 통일부, FAO, UNDP 등 UN 산하 수산기구, 대학, 연구소 등에 분산되어 있는 북한의 해양수산물 관련 정보의 집적화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韓國海洋水産開發院에 북한의 해양·수산물 관련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즉 북한의 해양수산물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북한의 식량 수급현황, 수산물 생산·가공시설의 실태, 어선·어구 등 어업생산시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질 경우, 어종별 생산량 및 수급실태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북한수산물의 적정반입량을 추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효율적인 수산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33개, 평안북도에 40개, 황해도에 32개 등 280여개를 확인하였으나, 그 이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됨.

第6章 要約 및 結論

남북한은 해방이후 체제수호를 위하여 서로 적대적인 상호 대립관계를 지속하였으나, 국제환경변화에 의하여 남북한은 대립보다는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의 추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1998년에는 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사업 및 유람선 운항을 통하여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경제협력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을 계기로 남북 경제교역이 시작된 이래 1997년 교역규모가 최초로 3억달러를 초과하는 등 교역규모가 급신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수산물의 반입량은 매년 증가하여 1997년에는 금액으로 약 1,400만달러를 기록하여 전체반입량의 7.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수산생산가공시설의 낙후,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남북 직항로의 미개설, 통관절차의 복잡성 등에 의하여 북한산 수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난에 의한 원유부족으로 어선용 유류부족이 심각하여 어선출어가 감소하여 어획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수산업의 생산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화해를 위해서라도 수산부문에서의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북한으로서는 현재의 외환부족과 경제난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남한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경제협력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북한 수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북한수산물의 대량반입 등 외생적인 공급충격에 의하여 국내 동종어민의 소득감소와 가격폭락이라는 시장교란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단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 수산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적인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간에 사회적 실현가능성이 있는 보수조합과 개인적 합리성을 만족시키는 보수조합을 최선의 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은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정책을 전개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수산업의 경우 북한수산물의 반입제도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민간부문이 주체가 된 교역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후된 북한의 냉동·냉장시설, 운송수단 등 대북 직접투자를 증대시켜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 한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결국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모두가 상대방의 현체제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한은 북한의 사회적 실현가능성 보수조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수산협력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접경지역인 극동·러시아·포셋트만지역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포셋트만지역은 가리비, 가자미 그리고 다시마 등 수산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으로 남북 상황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동지역의 수산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동 지역을 남북 수산협력의 확대와 북한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식량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남북간 수산협력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식량 확보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매우 중요한 민족공동의 과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參考文獻

- 김영세, 「게임이론 :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박영사, 1998.
- 박주현, 「게임이론의 이해」, 해남, 1998.
- 오승렬,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민족통일연구원, 1995. 12.
-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6.
- 통일원, 「남북교역추진현황 : 1988~1996」.
- 통일부, 「1997년도 남북교류협력 종합평가」, 1998.
- _____, 「남북교역 통계자료 : 1989~1997」, 1998.
- _____,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월호.
- _____, 주간 「북한동향」, 각호.
- _____, 「남북교역 실무안내」, 1998.
- 해양수산부,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1997.
- 한국은행, 「북한의 GDP 추정결과」, 각년도.
- 김 욱, “남북관계의 게임이론적 분석”, 「통일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12.
- 김태현·한태준, “양면게임의 논리와 세계화시대의 국제협상전략”, 「외교와 정치」, 1998.
- 김기수·정형찬, “남북한 공동어업정책의 과제 : EC 공동어업정책을 기초로”, 「수산경영논집」, 제24권 제1호, 1993. 6.
- 박성쾌·장창익, “남북한 수산협력 증대방안”, 「해양 21세기」, 나남출판, 1998.
- 한종백, “수산물”, 월간 「북한뉴스레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8. 5.
- 이병기·박영호·최종화, 「북한수산업의 산업적 기반 및 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3. 12.
- 유동민, 「수산물의 수요구조 및 전망에 관한 연구 : 해조류를 중심으로」,

수산경제연구원, 1995.

최세균, “북한산 농림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제도 개선방향”, 「농촌경제」, 제19권 제2호, 1996년 여름.

대한상공회의소, 「남북한 통일 이후의 산업구조정 : 북한 경제구조를 중심으로」, 1998

김민중, 「남북한 수산업의 발전방향 : 통일수산정책과제」, 1996.

北韓의 改正憲法中 經濟分野 內容 分析

- 북한은 이번 개정헌법에서 경제분야 조항을 상당부분 수정·보충함으로써 변화된 내부 경제현실을 법제화하고 향후 개방 지향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1. 소유의 구조 및 범위 조정

- 소유주체를 구헌법에서는 국가, 협동단체, 개인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국가, 사회·협동단체, 개인으로 규정하였음. (제20조~제24조)
 - 기존의 소유주체에다 상사를 포함한 사회단체(법인체)를 추가
- 생산수단 소유의 경우, 종래에는 국가와 협동단체만으로 제한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사회단체에로 까지 확대하였음. (제20조)
 - 사회단체에는 광명성총회사, 대성무역총상사 등 영리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회사 및 상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
- 사회·협동단체 소유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제22조)
 - 종래에는 트랙터 등 「농기계」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협동단체는 「농기구」만 소유할 수 있었으나 개정헌법에는 사회·협동단체도 「농기계」 소유 가능
 - 종래에는 「어선」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화물선, 여객선 등 다른 종류의 「선박」들도 소유 가능.
 - 개정헌법에는 종래와는 달리 부림짐승,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조문을 제외
 - ⇒ 가축, 주택, 기타 건축물 등의 사적 소유 및 거래 허용 시사

-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제24조)
 - 종래에는 개인소유를 「근로자」들의 소비재 소유로 제한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국민」으로 규정, 소유주체의 범위를 확대
 - 종래 “협동농장원들의 터발경리”를 개정헌법은 협동농장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지 “터발경리”로만 규정
 - ⇒ 근로자·사무원들의 터발경작 가능성
 - 종래와 같이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물론 ‘합법적 경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로 추가 허용
 - ⇒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 상업 등 사적 경제활동 허용 시사

2. 경제의 자율성 및 재산성 중시

- 자립적 민족경제의 개념을 ‘조국의 자주적 발전 위한 밀천’에서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밀천’으로 변경하였음. (제26조)
 - ⇒ 「자립」 개념이 정치우선적 개념에서 실리지향적 개념으로 변화
-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재산제를 실시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음. (제33조)
 - ⇒ 공장, 기업소의 자율성 제고 가능성
 - ⇒ 종래에 허용되지 않았던 공장, 기업소의 의사결정권이 포함된 독립재산제 실시 가능성
- 경제관리에서 원가, 가격, 수익성 등 경제적 공간을 고려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음. (제33조)
 - ⇒ 「물량」 중심의 생산에서 재산성을 고려하는 생산체계의로의 전환 가능성
-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정책 방향에 대해 종래의 「공업화」에 「현대화」를 추가·삽입하였음. (제28조)
 - ⇒ 시대에 부합하는 농업제도 개편 가능성
- 과학분야의 경우 종래에는 저작권과 발명권에 한정하였으나 개정헌법에는 특허권을 추가하였음. (제74조)

⇒ 개인, 사회단체 등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독점적 상품화 가능성

- 종래와는 달리 “국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제75조)
- ⇒ 통제된 북한사회에 지역간 주민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장거래 등 사회적 경제활동 활성화 가능성

3. 대외무역 강화 및 경제개방 확대 가능성 제시

- 사회단체, 협동단체들도 무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제36조)
 - 종래에는 국가만이 수행하던 대외무역 활동을 사회·협동단체까지 확대
- 특수경제지대에서 각종 기업의 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조문을 추가하였음. (제37조)
 - 나진·선봉 특구 이외에 남포·원산 보세가공무역지대, 신의주, 단천, 금강산 등에 경제특구 확대 설정 가능성

4. 종합평가

- 개정헌법 중 경제분야의 내용은
 -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는 구헌법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 대내적으로는 소유구조를 조정하고 재산성 원칙을 중시함으로써 그동안 묵인해왔던 사적 경제활동을 현실화시키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대외적으로는 대외무역과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외자유치를 활성화하려는데 개정의 초점을 두었던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 경제구조는
 - 생산측면에서는 종래의 물량(quantity) 위주 개념에서 가격(price) 중

시 개념으로 바뀌는 가운데

- 유통측면에서는 북한상업이 중앙당국의 일원적 공급형태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상품의 수급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사적 상업형태를 부분 수용할 것이며
 - 소비측면에서는 사적 상거래 활동에 힘입어 북한주민의 제도권내 소비기회가 많아짐으로써 당면한 실물공급부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결론적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여부는 개정헌법에 기초한 관련 법체계 마련 여부 및 시행정도에 달려 있다고 하겠으나 일단은 「북한식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법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임.

북한 개정헌법 조문 대비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 1 장 정 치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u>정권</u> 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u>국가</u> 이다.	수 정
제8조 국가는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8조 국가는 ...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u>모든 근로인민의</u> 이익을 옹호하며 보호 한다.	보 충
제 2 장 경 제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 은 국가와 <u>협동단체</u> 가 소유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 은 국가와 <u>사회협동단체</u> 가 소유한다	보 충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u>중요공장의 기 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와 체신기 관</u> 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21조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u>철도, 항공, 운 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 만, 은행</u> 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수 정
제22조 <u>협동단체의 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 있 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부림집승·농기구, 고기배, 건물같은 것</u> <u>과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u> <u>회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u>	제22조 <u>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단체에 들어 있 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u> <u>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u> ...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24조 개인소유는 <u>근로자들의</u>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u>근로자들의</u>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	제24조 개인소유는 <u>국민들의</u>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 진다.	일부 삭제 및 보충
<u>협동농장원들의</u> 터밭경리를 비롯한 <u>주민의</u>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u>개인수입</u> 에 속한다.	<u>터밭경리를</u> 비롯한 개인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u>그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u> 개인소유에 속한다.	일부 삭제 및 보충
제2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 조국의 <u>자주적 발전</u> 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 조국의 <u>유성번영</u> 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수정
제28조 국가는 ... 농업을 공업화하며	제28조 국가는 ... 농업을 공업화 <u>현대화</u> 하며	보충
제33조 —	제33조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도록 한다.	일부 신설
제36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u>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밑에서 한다.</u>	제36조 ...에서 대외무역은 <u>국가 또는 사회협동 단체가 한다.</u>	수정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u>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u>	제37조 국가는 ... <u>기업합영과 합작, 특수경제 시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u>	보충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 3 장 문 화		
제4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 <u>높은 문화·기술 수준을 가진 사회주의를 만들며</u>	제40조 ... 높은 <u>문화·예술수준을</u> 가진 사회주의를 만들며	수 정
제51조 국가는 ...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u>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u> 시킨다.	제51조 국가는 ...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삭 제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u>생활화</u> 할데 <u>대한 방침을 관철하여</u>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u>생활화하여</u>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	수 정
제56조 국가는 ... <u>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u>	제56조 국가는 ... <u>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 제도를 강화하여</u>	수 정
제 4 장 국 방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u>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u> 를 기본 내용으로	제60조 국가는 ... <u>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u> 를 기본 내용으로...	수 정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8조 <u>누구든지</u>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68조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	삭 제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75조 -	제75조 국민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신 설
제7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	제80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은 ... 과학·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 ※ 75조 신설로 조항 변경	수 정
제82조 <u>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u> 이다. 국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1조 구 80조 「국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부분과 합쳐서 81조로 변경	삭 제 수 정
제84조 국민은 국가재산과 <u>공동재산을</u> 아끼고 ...	제84조 국민은 국가재산과 <u>사회협동단체 재산</u> 을 아끼고	수 정
제86조 ... 조직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	삭 제
제 6 장 국가기구		
제87조 ...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상무기관은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이다.	—	삭 제
제88조 <u>입법권은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행사한다.</u>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u>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u>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91조</p> <p>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을 수정한다. 2.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한다. 3. <u>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u> 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 부주석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5. 정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 부총리, 위원장,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한다. 18.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중앙국가 기관들의 사업정령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20.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를 결정한다. 	<p>제9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수정·보충한다. 2. <u>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u> 3. ...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법을 승인한다.</u> - - - 6.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u>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 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한다. 16.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령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p>수 정</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수 정</p> <p>수 정</p> <p>수 정</p> <p>수 정</p> <p>삭 제</p>
<p>제92조</p> <p>정기회의는 <u>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u> 소집한다.</p> <p>임시회의는 <u>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u>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p>	<p>제92조</p> <p>...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u> 소집한다.</p> <p><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u>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수 정</p>
<p>제94조</p> <p><u>의장은 회의를 집행하여 대외관계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u></p>	<p>제94조</p> <p><u>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u></p>	<p>수정 및 삭제</p>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u>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이</u> 제출한다.	제95조 ... 토의할 의안은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u> 가 제출한다.	수 정
제97조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u>수정</u> 된다.	제97조 헌법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u>수정·보충</u> 된다.	수 정
제98조 최고인민회의의는 <u>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외교위원회, 통일정책위원회</u> 같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의는 <u>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u> 같은 부문 위원회를 둔다.	수 정
제98조 최고인민회의의 부문회의는 ... 휴회중에 <u>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u> 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8조 ...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u> 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수 정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u>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승인없이</u>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u>헌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u>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u>형사</u> 처벌을 할 수 없다.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신 설
	제106조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주권기관이다.</u>	
제100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의장, 부의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부의장은 각각 최고인민회의 의장, 부의장이 겸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의원들로 구성한다. 108조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 부위원장을 들 수 있다.</u>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기간 국가건설 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꾼이 될 수 있다.</u> 109조 최고인민회의 <u>상임위원회</u>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상설회의 규정 삭제, 상임위원회 규정 신설 및 보충
제103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101조</p> <p>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법령이 수정안을 심의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새로운 법안과 법 수정안을 채택한 경우 그와 어긋나는 법규들을 폐지한다. 3. 현행법령을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들과의 사업을 한다. 	<p>제110조</p> <p>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u>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 채택하며 채택 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u> 3. <u>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u> 4. <u>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u> 5. <u>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u> 6. <u>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u>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을 조직한다.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p> <p>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0. 다른 나라 국회, 국제의회기구들과의 사업을 비롯한 대외사업을 한다.</p>	<p>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p> <p>9. <u>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u></p> <p>10. <u>내각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u></p> <p>11. <u>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u></p> <p>12.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u></p> <p>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p> <p>14. <u>다른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u></p> <p>15. <u>다른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u></p> <p>16. <u>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u></p> <p>17. <u>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u></p> <p>18. <u>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u></p> <p>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p>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102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제104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p>	<p>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p> <p>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p> <p>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p> <p>제115조 <u>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제116조 최고인민회의 <u>상임위원회</u>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p>	
제2절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주석	—	삭 제
<p>제111조 국방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다.</p>	<p>제100조 최고군사지도 기관이며 <u>전반적인 국방관리 기관이다.</u></p>	보 충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113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제102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무력을 지휘 통솔하며 <u>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u>	보 충
제4절 중앙인민위원회	—	삭 제
—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국방부분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신 설
제5절 정무원	※ 정무원 삭제, 내각신설	
제124조 정무원은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제117조 <u>내각</u> 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u>전반적 국가관리 기관</u> 이다. —	수정 및 일부삭제
제125조 <u>정무원</u> 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부장들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u>정무원</u> 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제118조 <u>내각</u> 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u>상</u> 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u>내각</u> 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수 정
제126조 정무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신 설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1. <u>각 위원회, 부, 정무원</u> 직속기관, <u>지방 행정경제위원회</u> 사업을 지도한다.</p> <p>2. <u>정무원</u>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p> <p>5.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p> <p>8.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p> <p>9. <u>정무원</u>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p>	<p>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p> <p>3. <u>내각의 위원회, 성·내각</u>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p> <p>4. <u>내각 직속기관, 중요행정 경제기관, 기업소</u>를 내오거나 없애며 <u>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u></p> <p>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u>체육, 노동 행정, 환경보호, 관광</u> 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 집행한다</p> <p>9.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p> <p>10.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p> <p>12. <u>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u></p>	<p>신 설</p> <p>수 정</p> <p>수 정</p> <p>보 충</p> <p>신 설</p> <p>수 정</p> <p>수 정</p>
—	<p>제120조</p> <p>내각 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p>	신 설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p>제127조</p> <p><u>정무원은</u>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갖는다. <u>정무원</u> 전원회의는 <u>정무원성원</u> 전원으로 구성하며 <u>정무원 상무회의</u>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u>정무원성원</u>으로 구성한다.</p>	<p>제121조</p> <p><u>내각</u>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u>내각</u> 전원회의는 <u>내각성원</u>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 밖의 총리가 임명하는 <u>내각성원</u>들로 구성한다.</p>	수 정
<p>제128조</p> <p><u>정무원</u> 전원회의는 <u>국가관리사업</u>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u>정무원 상무회의</u>는 정무원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p>	<p>제122조</p> <p><u>내각</u> 전원회의는 <u>행정경제사업</u>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u>상무회의</u>는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p>	수 정
<p>제129조</p> <p><u>정무원은</u> 결정과 지시를 낸다</p>	<p>제123조</p> <p><u>내각</u>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p>	수 정
<p>제130조</p> <p><u>정무원은</u>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u>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u>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앞에 책임진다.</p>	<p>제125조</p> <p><u>내각</u>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u>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u> 앞에 책임진다.</p>	수 정
<p>제131조</p> <p>새로 선거된 정무원총리는 정무원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u>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u> 주석앞에 선서한다.</p>	<p>제126조</p> <p>새로 선거된 <u>내각총리</u>는 <u>내각성원</u>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p>	수 정
<p>제132조</p> <p><u>정무원위원회</u>와 <u>부는</u> <u>정무원</u>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다. 정무원위원회 부는 지시를 낸다.</p>	<p>제127조</p> <p><u>내각위원회</u> 성은 <u>내각</u>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u>중앙의 부문별 관리 기관</u>이다.</p>	수 정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	제128조 내각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신 설
-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 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신 설
—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신 설
제135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133조 <u>지방인민회의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u>	일부신설
제13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5. 해당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을 선거 또한 소환한다. 6.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34조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 —	수 정 삭 제 삭 제

구 현 법	신 현 법	비 고
제139조 의장은 회의를 <u>집행</u> 한다.	제137조 의장은 회의를 <u>사회</u> 한다.	수 정
제140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u>지방인민회의의 결정은 해당 인민위원회가 공포한다.</u>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	일부삭제
제14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에 지방주권기관이며, <u>해당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u> 이다.	보 충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u>서기</u> <u>장</u> ,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u>사무장</u> , 위원들로 구성한다.	수 정
제143조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u>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u> 5. <u>해당 행정경제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u> 7. 해당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u>해당 행정경제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의</u>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1조 4. 해당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u>내각과 내각위원회</u> 의 법령, 정령, 결정지시를 <u>집행한다.</u> 5. <u>해당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u> — 11. <u>하급인민위원회의</u> 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수 정 수 정 삭 제 수 정

구 현 법	신 현 법	비 고
9. 인민회의 휴회중에 해당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 — — —	—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의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기관에서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신 설
—	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신 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인민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	삭 제
—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구 헌 법	신 헌 법	비 고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와 <u>상급 인민회의</u> ,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그 앞에 책임진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u>자기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u>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u>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u> 복종한다.	수정 및 보충
제7절 지방행정경제위원회	—	삭 제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제8절 재판소와 검찰소 검찰관련 규정이 재판소규정 앞으로 이동	
제160조 ... <u>중앙재판소는 중앙인민위원회의의 지도를 받는다.</u>	—	삭 제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u>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u> 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u>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u> 앞에 책임진다. —	수정 및 일부삭제
제165조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u>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 지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정무원 결정 지시</u> 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제150조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u>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결정 지시</u> 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 통제한다.	수 정
제167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u>최고인민회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중앙인민위원회</u> 앞에 책임진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u>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u> 앞에 책임진다.	수 정